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등〉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02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언론보도 인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조) .....  | 3  |
| 2. 정의(안 제2조) .....                             | 6  |
| 3.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안 제5조) .....                   | 22 |
| 4. 중재위원 전문성 강화(안 제7조) .....                    | 24 |
| 5.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안 제8조) .....                   | 27 |
| 6. 중재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 30 |
| 7.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 등(안 제14조) .....                | 33 |
| 8. 정정보도 청구방법 다양화 등(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 40 |
| 9. 정정보도 게재방식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    | 43 |
| 10. 보도 원본 등 보관기간 확대(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     | 51 |
| 11. 반론보도청구 범위 확대(안 제16조) .....                 | 54 |
| 12. 추후보도청구 범위 확대(안 제17조) .....                 | 57 |
| 13. 정정보도 등 알림 표시 및 표시 방법(안 제17조의2) .....       | 60 |
| 14. 손해배상 조정신청시 허위(조작)보도 명시(안 제18조제2항) ...      | 70 |
| 15. 중재지원센터 증거조사(안 제20조제2항) .....               | 72 |
| 16. 법원의 정정보도등 명령시 매체별 게재기준 준용(안 제27조제2항) ..... | 74 |

|                                                             |    |
|-------------------------------------------------------------|----|
| 17. 손해배상(안 제30조) .....                                      | 76 |
| 18. 언론사등의 자료제출의무(안 제30조의2 신설) .....                         | 81 |
| 19. 입증책임(안 제30조의3 신설) .....                                 | 85 |
| 20.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안 제30조의4 신설) .....                          | 89 |
| 21.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안 제33조, 제33조의2,<br>제33조의3 신설) ..... | 93 |
| 22. 과태료(안 제34조제1항) .....                                    | 99 |

## ※ 참고자료

|                        |     |
|------------------------|-----|
| 1.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 103 |
| 2.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 ..... | 110 |
| 3. 관련 언론보도 .....       | 112 |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노중면의원 등 14인

나. 제 출 일 : 2025. 11.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공감받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정비함.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  
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  
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  
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  
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  
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언론보도 인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조)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보도 인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목적 규정에 인용 추가  
(안 제1조).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인용(引用)<br>과 매개-----<br>-----<br>-----<br>-----<br>-----<br>-----<br>-----.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권리 또는 법익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빅카인즈에 참여하는 5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인용문 수를 분석한 결과 경제분야 85.7%, 사회분야 100.2%, 정치분야 162.4%로 기사 내 인용문의 비율이 높음.<sup>1)</sup>
- 이에 개정안은 안 제1조에 인용(引用)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사의 기사 인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최초 언론보도와 이를 매개하는 경우 외에, 인용하여 확산하는 경우까지 언론중재법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인용’의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인용’은 기사 전체 또는 일부를 전재하는 경우, 타 매체 보도를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소개하는 경우, 링크만 제공하는 경우, SNS에서 기사 내용을 인용·

---

1) 강아영, “정치 기사에 ‘직접 인용’이 너무 많다”, 한국기자협회, 2020.7.29  
[https://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8012&utm\\_source=chatgpt.com](https://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8012&utm_source=chatgpt.com),

소개하는 경우, AI를 통한 자동 요약·재가공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경계가 모호한 ‘인용’을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개념이 모호해 법률 제·개정 기본인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정의(안 제2조)

### 가. 개정안 요지

#### 1) 언론사의 대표 정의(안 제2조제13호)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사등의 대표자를 언론사의 대표자로 규정(안 제2조제13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12. (생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13. “ <u>언론사등의 대표자</u> ”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 13. “ <u>언론사의</u> ----- <u>언론사</u> -----<br>-----<br>-----<br>-----.<br>-----<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br>-----.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언론사등의 대표자’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14조제1항<sup>2)</sup>을 인용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sup>3)</sup>까지에서 ‘언론등’, ‘언론사등’, ‘언론사등의 대표자’를 규정하면서 안 제2조제13호의 내용을 각각 ‘언론사의 대표자’,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로 대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언론등”이란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3. “언론사등”이란 언론사와 언론등의 사업자 또는 제공자를 말한다.
24.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언론사의 대표자와 언론등의 사업 또는 제공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안 제2조제22호 및 제23호에서 ‘언론등’과 ‘언론사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제24호의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본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 바, 법률체계상 본조항에서 안 제23호를 인용하여, ‘언론사의’를 ‘언론사등의’로 수정하고,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을 ‘제2조제23호에 따른 언론사등의 사업 또는 제공’으로 수정하며, 안 제2항제24호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중재법상 정의를 확대, 신설하여 피해자 구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입법취지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언론보도의 정의 등(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 가) 개정안 요지

- ‘사실적 주장’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언론보도 정의 규정에서 실체적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14. “ <u>사실적 주장</u> ”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 14. <삭 제> |

| 현행                                                 | 개정안                                                                                                                                            |
|----------------------------------------------------|------------------------------------------------------------------------------------------------------------------------------------------------|
| 15. “언론보도”란 <u>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u> 말한다. <단서 신설> | 15.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을----- 다만,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근거 제시 행위와 제시된 근거는 언론보도에 해당할 수 있다.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이에 관한 보도를 ‘언론보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실체적 정의를 안 제2조제15호에 직접 규정하면서, 언론보도의 정의를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 및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근거 제시 행위와 제시된 근거’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넓게 정의하여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현행법은 보도의 주체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은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오류가 생길 점을 감안하여 행위의 주체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현행 제14호 ‘사실적 주장’ 정의는 현행법 제16조(반론 보도청구권)<sup>4)</sup>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요건 해석을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제15호 ‘언론보도’ 정의가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언론의 행위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서 알리는 행위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로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제14호 ‘사실적 주장’ 정의와 관련하여, 반론보도 청구권 요건 해석을 위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3) 정정보도 등의 정의(안 제2조제16호, 제17호 개정 및 제17호의2, 제17호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 보도 규정 신설(안 제2조제16호, 제17호 개정 및 제17호의2, 제17호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16. -----언론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br>-----별도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언론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그 보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
|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17. -----언론보도의 사실-----<br>-----<br>-----.                                                                                     |
| <신설>                                                                      | 17의2. “허위보도”란 제15호의 “언론보도” 가운데 허위의 사실 또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포함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u></p> <p><u>17의3. “허위조작보도”란 제17호의2에 따른 “허위보도” 가운데 보도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u></p>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안 제2조제16호는 정정보도의 정의에 보도의 내용 정정, 보도의 삭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써,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또한, 안 제2조제17호는 반론보도의 정의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을 ‘언론보도의 사실’로 개정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보도의 범위를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의

요소를 감소시키고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안 제2조제17의호2와 안 제2조제17호의3은 각각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를 규정해 정정보도등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해당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의안번호 221368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sup>5)</sup>의 정의<sup>6)</sup>를 차용한 것으로 향후 개정 사항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제23호 ‘언론사등’ 정의는 제24호 ‘언론사등의 대표자’ 정의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제25호 ‘언론보도등’ 정의에 제15조 언론보도의 정의를 중복 기술한 부분도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보도, 허위조작보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개정 사항에 따라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5) 제43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2.10) 대안반영폐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제1항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및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제17호의3 ‘허위조작보도’ 정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별도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노조**는 허위조작보도를 허위보도 중에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작행위가 아닌 타인을 해할 가능성으로 판가름함에 따라 규정의 표제와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의 규정 개정 및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등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8호 개정 및 제19호의2, 제19호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개정하고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8호 개정 및 제19호의2, 제19호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8. -----언론보도를-----<br>-----<br>-----.<br>-----<br>-----<br>-----.                             |
| 19. (생략)                                                                                                        | 19. (현행과 같음)                                                                                   |
| <신설>                                                                                                            | 19의2.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란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u>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도, 인용할 목적으로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u></p> <p>19의3. “<u>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공자</u>”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를 말한다.</p> |

#### 다) 검토사항

- 안 제2조제18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안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를 제공·매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안 제2조제19호의2 및 제19호의3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정대상에 뉴미디어를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침해 구제 대상인 언론보도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 상의 충돌의 여지가 있어 온 바, 개정안은 언론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도를 조정대상으로 명시하여 현행 법 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법의 언론 중재 조정대상에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조정대상 판단과 조정실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조정대상 매체 기준 제안보고서」를 마련함으로써 2022년 8월부터 언론사의 유튜브 형식의 보도등을 언론 중재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법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게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sup>7)</sup>을 내린 바 있음.

○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8)</sup>은

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482 정정정보도청구 등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정보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제공하는 정보가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므로 해당 정보가 ‘보도의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담당 소관이 결정되는데, 현행법은 보도<sup>9)</sup>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

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참고로, 「방송법」 제2조제24호는 보도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언론노조는 온라인 언론 콘텐츠는 새롭게 개정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의 수범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간의 수범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5) ‘언론등’을 포함한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등’, ‘언론사등’, ‘언론사등의 대표자’ 및 ‘언론보도등’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22. “언론등”이란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
| <신설> | 23. “언론사등”이란 언론사와 언론등의 사업자 또는 제공자를 말한다.                    |

·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검토사항

- 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22호에서 ‘언론등’을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에서 각각 ‘언론사’와 ‘언론사의 대표자’를 삭제하여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25호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5호에서 ‘언론보도’를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사 또는 제작물’을 포섭하고 있는바, 해당 조문에서 ‘언론사등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자체 제작을 통하여 알리는 행위와 그 제작물, 그리고’ 중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자체 제작을 통하여 알리는 행위’가 상기 정의 규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내용을 ‘언론보도와’로 수정하더라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안 제5조)

#### 가. 개정안 요지

- 안 제2조에서 언론등을 기정의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책임면제 기준 적용을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의 경우도 적용(안 제5조).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언론등에 의한 <u>피해구제의 원칙</u> ) ① <u>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u> 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 제5조(언론등에 의한 <u>피해구제</u> )<br>① <u>언론등은</u> -----<br>-----<br>-----<br>-----<br>-----<br>-----<br>-----<br>-----<br>-----<br>-----<br>-----. |
|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② -----<br>-----<br>-----                                                                                                                   |

| 현행                                                                                           | 개정안                                                                                      |
|----------------------------------------------------------------------------------------------|------------------------------------------------------------------------------------------|
| <p>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u>보도 내용과</u>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 <p>-----<br/>-----<br/>-----<u>보도, 인용, 매개와</u>-----<br/>-----.</p> <p>1.·2. (현행과 같음)</p> |

#### 다.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안 제2조에서 언론등으로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섭하도록 기정의하고 인용 및 매개에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체부는 안 제1조에서 매개, 인용까지 언론중재법을 적용함에 따라 책임면제 기준 대상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개정안 제2조에서 언론등을 정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4. 중재위원 전문성 강화(안 제7조)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요건에 언론 관련 사건 경험 등 전문성 추가(안 제7조).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br><u>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u><br>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br><u>언론보도등으로 인한</u> -----<br>-----<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br>-----<br>-----<br>-----<br>-----.                              |
|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u>법원행정처장이</u> 추천한                                                                                        | 1. -----<br>----- <u>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u>                                     |

| 현행                                                       | 개정안                                                                         |
|----------------------------------------------------------|-----------------------------------------------------------------------------|
| 사람                                                       | <u>담당하였던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u> -----                                              |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 2. -----<br>----- <u>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로서 「변호사법」</u> -----<br>-----       |
|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 <u>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u> -----<br>----- |
|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u> 사람                    | 4. ----- <u>학식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u> -----                                       |
| ④ ~ ⑪ (생략)                                               | ④ ~ ⑪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자,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중

재위원 중 법관 및 변호사의 요건에 언론 사건 다수 담당 경력을 추가하고 언론사 종사자 요건에 취재·보도뿐 아니라 제작업무(인터넷 기반 포함)를 추가, 이외 전문가는 학식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언론 관련 사건 경험, 전문성 추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체부**는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5.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안 제8조)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안 제8조).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생략)             |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u>당원</u>                 | 2. -----<br><u>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u>사람</u> | 3. -----<br>-----<br><u>-사람 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 <u>&lt;신설&gt;</u>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4. 5. (생략)</p> <p>③ (생략)</p> | <p><u>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다. 검토사항

- 중재위원 결격사유에 현직 정당원 외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력을 추가하고 공직선거 후보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추가하여 중재위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제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 공감하나, 제4호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증명서 등을 통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하여 당사자가 이를 숨길 수 있고, 위촉 이후 관련 사실 발견되어 당연 해촉되는 경우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5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위원은 전문위원까지 포함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은 제외됨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6. 중재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중재위 조정 신청 관련 사실관계 조사, 언론중재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사무처)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 | 제11조(사무처와 중재지원센터)<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언론보도등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중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둔다.</u><br>⑤ 제4항에 따른 중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u>조정 신청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허위 여부,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조사</u><br>2. <u>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의 이행 여부 관리 및 감독</u> |

| 현행                                                         | 개정안                                                                                        |
|------------------------------------------------------------|--------------------------------------------------------------------------------------------|
| ④ 사무처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br>⑥ -----, 제4항에 따른 중재지원센터의 운영 등 그-----<br>-----. |

####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는 중재위원회 사무 지원,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운영중이나, 개정안은 조정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중재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는 있어 보임.
- 다만, 사실관계 조사 업무 등은 현재 사무처가 수행하고 있어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문의 개정보다는 현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중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정 관련 조사 등을 수행토록 하여 피해구제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 공감하나, 중재지원센터의 업무

중 조정 관련 사실관계 조사는 현재 사무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중복되고, 법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언론중재위가 아닌 소관부처(정부)의 역할이므로, 별도로 센터를 신설하기보다 사무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인력 등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수반될 필요가 있고,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조치의 이행 여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이행에 대한 제재권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7.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 등(안 제14조)

### 가. 개정안 요지

-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 2년 이내에(다만, 계속 게시 중인 온라인 보도물은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제14조제1항).
-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정정보도 청구권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제51조) 명시(안 제14조제4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br>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br>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br>-----<br>-----있을 후 2년-----<br>-----언론사등에-----<br>-----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를-----<br>-----<br>-----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계속 보도 중이거나 인용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등에 허위가 분 |

| 현행                                                                                                                                                                        | 개정안                                                                                                                                                                                                                    |
|---------------------------------------------------------------------------------------------------------------------------------------------------------------------------|------------------------------------------------------------------------------------------------------------------------------------------------------------------------------------------------------------------------|
| <p><u>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③ (생략)</p> <p>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p> | <p><u>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u></p> <p><u>--날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그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p> <p>-----</p> <p>-----</p> <p>-----</p> <p>-----</p> <p>-----.</p>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의 기한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손해배상의 조정신청 포함), 법원 소 제기에도 동일한 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매체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하며 언론보도등의 유통기한이 길어지게 되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의 청구 기한이 지

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단기의 제척 기간으로 인해 동법에 따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실정<sup>10)</sup>으로, 이에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등의 기한을 현행의 4배로 연장하여 동 법에 따른 피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동 법상 청구기한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규정된 것은 고의·과실, 위법성을 불문하는 정정보도 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었다는 점, 동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간 연장에 따른 분쟁 증가는 언론사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언론의 공적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 및 언론의 공적책임 강화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법사위 의결된 바 있음.

- 아울러, ‘정정보도’를 ‘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로 표현한 부분은, 제2조(정의)에서 이미 정정보도에 정정 또는 삭제

---

10) 지난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는 “일반인의 경우 자신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지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은 경우도 있고, 정정보도등을 청구하거나 중재 신청, 소 제기 등의 절차를 수행할 경우 이를 위한 사실조사, 반박자료 수집 등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나 현재의 청구기한은 실무적으로 관점에서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제388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1. 6. 30.)

및 별도 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온라인상 보도에 대하여 무기한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은,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청구기간에 부합하도록 보관하도록 한 제15조제8항11)의 규정과 상충하는 바, 양 규정 간 체계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구조적 모순 및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청구기간 확대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다른 당사자인 언론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되는 부담이 있고 특히 온라인상 보도에 대해서는 기한의 제약이 없어 분쟁가능성이 무제한 계속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당사자의 권익보호 간의 균형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1년으로 연장하고, 온라인상 보도에 대한 무기한 청구를 가능토록 한 단서 조항은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 원본 또는 사본 등의 보관기간을 청구기간에 맞추어 한정하여 제15조제8항과 충돌되어 구조상 모순 및 법적 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⑦(생략)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하였음.

- 아울러 정정보도를 ‘정정 또는 삭제와 별도의 정정보도’로 기술한 부분은, 제2조(정의)에서 이미 정정보도에 정정 또는 삭제 및 별도 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중복 의미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피해에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 제15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현재와 같은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 언론분쟁은 특성상 조기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렵기에 기사가 인터넷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주관적 기산점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언론사 부담이 증가하는바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삭제 청구 가능과 관련하여, 기사 삭제는 민법 제764조 및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기사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나 언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헌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심리가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양당사자의 균형있는 권익 보호를 위해 신청 기한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에서는 해당 기한을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보도등이 있은 후 1년으로 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소송과 달리, 정정보도 청구는 복잡한 법적 입증절차가 필요 없고,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고 의사를 표시하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청구기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뉴스 보도가 실시간 유통·검색되고 있어 개인이 관련 보도를 인지하는 시간이 오히려

짧아진 상황에서 청구기간을 뚜렷한 통계·실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대폭 연장하는 것은 언론 보도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가. 개정안 요지

-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40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p> | <p>② -----<br/>-----<br/>-----<br/>-----하고, 이<br/>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br/>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br/>-----<br/>-----<br/>-----<br/>-----<br/>-----<br/>-----<br/>-----.</p>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추후보도 및 반론보도는 정정보도 청구의 방법을 준용<sup>12)</sup>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서면 외에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정정보도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써, 피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언론사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체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가능하고, 언론사가 3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부로 간주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9. 정정보도 게재방식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 수용 시, 내용·크기뿐 아니라 방식까지 피해자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3항), 정정보도에 정정사실뿐 아니라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내용 등도 포함(안 제15조제5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u>내용·크기</u>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③ -----<br>-----<br>-----<br>---- <u>내용·크기·방식</u> -----<br>-----<br>-----<br>-----<br>-----<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④ (생략)</p> <p>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u>원래의 보도</u>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p> <p>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u>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u>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u>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u> 하여야 한다.<br/> <u>&lt;후단 신설&gt;</u></p> | <p>④ (현행과 같음)</p> <p>⑤ -----<br/> -----<u>원래의 언론보도</u><br/> <u>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허위보</u><br/> <u>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u><br/> <u>의 구별,</u>-----<br/> -----<br/> -----<br/> -----<br/> -----.</p> <p>⑥ -----<br/> -----<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br/> <u>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방송하</u><br/> <u>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u><br/> <u>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4조제</u><br/> <u>1항 단서에 따른 계속 보도, 인</u><br/> <u>용, 매개 중인 언론보도등에 대</u><br/> <u>한 정정 또는 삭제의 공표를</u><br/> <u>포함한다)</u>-----<u>. 이 경우</u><br/> <u>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u><br/> <u>기간 등은 해당 언론보도등이</u><br/> <u>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u><br/> <u>등인지의 구별, 언론사등의 매</u></p> |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체력, 정정보도 대상 언론보도 등의 전파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p> <p>1.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언론보도등이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으로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통상적인 속도의 음성으로 읽을 것</p> |
| <u>&lt;신설&gt;</u> | <p>2. 신문: 언론보도등이 게재되었던 지면(紙面)의 좌상단에 게재할 것</p>                                                                                                                              |
| <u>&lt;신설&gt;</u> | <p>3. 인터넷신문: 인터넷 대표 주소로 접속할 때 표출되는 첫 화면(이하 “첫 화면”이라 한다)의 최상단과 이용자가 정정보도등 및 정정보도청구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에 게재할 것</p>                                      |
| <u>&lt;신설&gt;</u> | <p>4. 인터넷뉴스서비스: 첫 화면 또는 보도 전용 화면의 최상단과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게재하며, 정정보도 대상 언론 보도등이 첫 화면에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정정보도 역시 반드시 첫 화면에도 게재할 것(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매개한 언론 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는 매개 대상인 언론 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p> <p>5.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지정된 제목, 내용, 최초 노출 화면을 준수하여 제작한 정정보도 동영상 콘텐츠를 정정보도 대상 동영상 콘텐츠가 게재되었던 위치와 무관하게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접속 화면 중 최상위 화면에 게시할 것</p>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등을 수용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등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등의 방식에

대하여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3)</sup>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등은 원 보도문보다 길이가 짧고 주목도가 비교적 낮은 지면 또는 시간대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 수용 시, 내용·크기뿐 아니라 방식까지 피해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정정보도에 정정사실뿐 아니라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내용 등도 포함하도록 하며,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방식을 명문화하고,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은 법원이 정하게 하도록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정정보도에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해당 사항이 언론사등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당사자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점에서 그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매체별로 정정보도의 게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경우, 보도의 사실왜곡 정도나 피해의 경중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문 1면 등 특정 지면에 정정보도 등을 강제하게 되어 언론사의 편집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정정보도 등을 수용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증가하여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 수용을 회피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상당수 사건이 법원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제부**는 정정보도 방식을 구체화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정정보도에 피해 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 내용 등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해당 사항은 언론사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많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매체별로 게재방식을 구체화한 것은 보도의 사실왜곡 정도,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정정보도등을 신문의 첫 지면 등에 하도록 강제할 경우 언론사의 편집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등을 수용하기 위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의 수용을 회피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대부분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정정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은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많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 필요하며,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부분 관련하여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소송과 달리 언론사등이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언론사등이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소제기가 전제되는 것이 아닌 제15조제6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하기에 제26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노조**는 게시 방식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다만 매체별로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각 사안별로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가독성, 정보의 중요도 및 연관성에 따라 기사의 분량과 크기, 위치를 배치하는 종이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한 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자율권과 편집권 침해, 정정보도 지면으로 인해 국가적 이슈나 정책이 뒤로 밀린다면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개정안의 기대 법익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20대·21대 국회에서 유사 내용 개정안 발의 시 문체위 검토보고서에서 정정보도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제한으로 신속한 분쟁 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신문사의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신문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0. 보도 원본 등 보관기간 확대(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 가. 개정안 요지

- 보도원본 또는 사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보관기간을 공표 후 2년으로 확대하고, 청구 및 조정신청 중인 경우 절차 종결 전까지 폐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관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청구 및 조정신청 중인 경우 절차 종결 전까지 폐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u>사본을</u> 공표 후 <u>6개월간</u> 보관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 ⑦ -----<br>-----<br>-----<br>-----<br>-----<br>----- <u>사본, 보도가 사실임을</u><br><u>입증할 자료(이 조에서 “자료</u><br><u>등”이라 한다)를</u> ----- <u>2년</u><br><u>간</u> ----- <u>. 다만, 제1</u><br><u>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u> |

| 현행                                                                                                                                                 | 개정안                                                                                                                                                                                                                                                                                                                                 |
|----------------------------------------------------------------------------------------------------------------------------------------------------|-------------------------------------------------------------------------------------------------------------------------------------------------------------------------------------------------------------------------------------------------------------------------------------------------------------------------------------|
| <p>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u>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u><br/><u>&lt;단서 신설&gt;</u></p> | <p><u>청구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중인 언론보도등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자료등을 폐기할 수 없다.</u></p> <p>⑧ -----<br/>-----<br/>-----<br/>-----보<br/>도등의-----<br/>보도등의-----전자기<br/>록(이 조에서 “전자기록등”이라<br/>한다)을 2년간-----<br/>-. 다만, 제17조의2제1항에 따<br/>라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제18<br/>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중인<br/>언론보도등인 경우에는 해당<br/>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전자<br/>기록등을 폐기할 수 없다.</p> |

##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 사업자는 보도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 원본이나 사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에 따라 자료 보관 기간도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조문 개정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 시 자료 보관 기간도 확대 필요하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에 대해 양당사자의 권익 보호 간의 균형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보도 원본 등의 보존기간도 이에 맞춰 1년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방송사업자의 자료 보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83조 제2항<sup>14)</sup>의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4)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 11. 반론보도청구 범위 확대(안 제16조)

## 가. 개정안 요지

- 반론보도 청구대상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음을 명시(안 제16조제1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br><u>&lt;후단 신설&gt;</u><br><br>②·③ (생략)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br>-----<br>-----<br>-----<br>-----<br>이 경우 언론보도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br>②·③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 대상을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의견·논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피해자가 의견·평가적 보도로 인해 침해된 명예·인격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론권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는 있어 보임.

- 다만, 언론보도등이 사실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의견·논평 등 주관적 사항까지 확대할 경우, 공익적 비판이나 논평을 회피하게 되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나아가 의견에 대한 반론이 결국 의견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되어 분쟁 해결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피해자의 반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공감하나, 언론보도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의견, 논평 등 주관적 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되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의견, 논평 등에 대한 반론보도는 결국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본문에서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에 관해 허용되는 것인데 단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아 본문과 단서의 내용이 모순되고, 의견에 대해서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논평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반론보도청구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히는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어, 본래 취지에 맞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반론 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가. 개정안 요지

-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57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범죄 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 관련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무죄 판결 등 혐의 소멸에 따른 형사 절차 종결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행정처분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 도입시 청구 대상을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하는 대신 현행 형사범죄 무죄판결 사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상의 조치’를 ‘비위 혐의 관련 행정처분’으로 명확화하고 ‘행정처분 절차 종결’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형사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여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취지 공감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허용함에 있어 대상을 모든 행정처분이 아니라(행정처분은 인허가, 의무부과 등을 모두 포함), 현행 형사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유사한 수준으로 한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상의 조치’를 ‘비위협 의와 관련된 행정 처분’으로 수정하고, ‘행정처분 절차 종결’을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로 수정하여 대상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3. 정정보도 등 알림 표시 및 표시 방법(안 제17조의2)

#### 가. 개정안 요지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등을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판결·합의가 나왔을 때 관련 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제17조의2제1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상호 정정보도청구 내용 통보 의무 신설(청구받은 것으로 간주)(제17조의2제2항)
-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피해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매개행위를 중단하면 정정보도청구 수용으로 간주(제17조의2제3항, 후단신설)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알림 표시 제작 시 6개 정보를 포함하고(제17조의2제4항) 인터넷신문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내용 통지(제17조의2제5항)
- 6개 정보는 별도의 화면으로 마련하고(제17조의2제6항), 알림표시 의무 발생 날부터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제17조의2제7항), 중재위 및 법원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언론보도를 수정 또는 삭제(제17조의2제8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br>-----<br>-----<br>-----<br>-----<br>-----뒤 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 판결 또는 합의가 나왔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표시(이하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
|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                                                                                                                                                                                  | ②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

| 현행                                                                                                                                                                                                                         | 개정안                                                                                                                                                                                                                                                                                                                                                                                                                                                    |
|----------------------------------------------------------------------------------------------------------------------------------------------------------------------------------------------------------------------------|--------------------------------------------------------------------------------------------------------------------------------------------------------------------------------------------------------------------------------------------------------------------------------------------------------------------------------------------------------------------------------------------------------------------------------------------------------|
| <p><u>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③ <u>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u></p> <p><u>&lt;신 설&gt;</u></p> | <p><u>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매개 관계의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u></p> <p>③ <u>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경우 피해자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u><br/> <u>-----.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행위를 중단하면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등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u></p> <p>④ <u>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를 제작할 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p> <p>1. <u>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인, 청구대상, 청구일</u></p> |

| 현행   | 개정안                                                                                                                                                                                                                                           |
|------|-----------------------------------------------------------------------------------------------------------------------------------------------------------------------------------------------------------------------------------------------|
|      | <p>2.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p> <p>3.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현황</p> <p>4.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 또는 중재 여부 및 결과</p> <p>5.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여부 및 결과</p> <p>6. 정정보도청구등과 함께 손해배상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및 결과</p> |
| <신설> | <p>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보도등의 제공·매개 관계에 있는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신설> | <p>⑥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이하</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 중 최상위에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으로 연결되는 안내를 표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날까지 제4항의 내용을 정정보도등 확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조정 결정(제22조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을 포함한다), 중재 결정, 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언론보도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p> |

##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사제공 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을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판결·합의 시 관련 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간 상호 정정보도 청구 내용 통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구 수용 여부를 통지할 경우 피해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매개행위를 중단하면 정정보도청구 수용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아울러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알림표시 제작 시 6개 정보<sup>15)</sup>를 포함해야 하며, 인터넷신문사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통지하고 별도 화면으로

---

15) 1. 청구인, 청구대상, 청구일, 2. 청구 수용여부, 3. 청구 진행현황, 4. 중재위 조정여부 및 결과, 5. 관련 소 제기여부 및 결과, 6. 손해배상등 병합소송여부 사실 및결과

마련하도록 하고, 알림표시 의무 발생일부터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상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함.

- 또한 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언론보도를 수정·삭제하도록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1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종이신문·방송·뉴스통신사업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본조문과 정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 화면 표시 등의 의무를 전통 매체에 강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표시사항을 ‘해당 결정·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으로 한정할 경우 확정 이전 1심 결정 등을 게재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제4항에서 이미 6개 항목으로 세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항에 따른 사항 표시로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2항·제3항에서 청구 내용 및 수용 여부 통지 대상을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현행법상 기사제공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 적용 시 타 언론사의 의무 누락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기사제공언론사’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매개행위 중단시 정정보도 수용 간주’ 단서 조항은 「신

문법」 16)상 기사제공언론사 동의 없이는 편집·조치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제부는 사용자에게 정정보도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언론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 공감하나,
- 다만, 안 제1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종이)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의 규정과 맞지 않고, (종이)신문사업자 등에게 별도화면으로 정정보도 진행 현황 등을 표시하도록 강제한 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안 제1항의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 포함)’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제1항에서 중재위 또는 법원의 최초 결정, 판결 등이 나왔을 때 표시 하는 사항을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표시사항을 ‘해당 결정, 판결 또는 합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경우 확정판결 이전에 1심 결정문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제4항에서 6개 항목에 걸쳐 표시사

---

16)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항에 따른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안 제2항과 제3항에서 청구 내용 및 청구 수용 여부 통지 대상을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 부분은, 현행법에서는 청구 내용 대상을 인터넷신문사업자를 포함한 기사제공언론사(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로 하고 있어 개정안 적용 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제외한 언론사들은 의무대상에서 오히려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안 제3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을 매개한 행위를 중단하면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등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매개한 기사에 대해 기사제공언론사 동의를 받아 편집 등을 할 수 있고 독자적인 조치는 제한되는바,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조문명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이고 내용도 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사업자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확정판결 전 정정보도의 내용을 게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판결의 가집행의 성격을 가지는 바, 안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하급심 재판의 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법학계 다수설에 반하고, 상급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노조**는 확정 결정이나 판결 전에도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내용을 자세히 표시하게 하면 사실상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짐. 이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에 대한 언중위의 조정 결정이나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게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적어도 청구내용 표시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정정보도 결정 내용을 기사별로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행 조정·합의 중심 제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된 광범위한 ‘알림 표시 의무’는 사실상 사법절차 진행 상황의 상시적 공개를 강제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4. 손해배상 조정신청시 허위(조작)보도 명시(안 제18조제2항)

### 가. 개정안 요지

-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배상 관련에 대해 중재위에 조정 신청 시 언론보도등이 허위(조작)보도등인지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액 명시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조정신청) ① (생략)                                                                                    | 제18조(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u>손해배상액</u> 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 <u>해당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액</u> -----.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배상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시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개정안은 조정신청 시 언론보도등이 ‘허위보도’인지 ‘허위 조작보도’인지 구별하여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문체부**는 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를 객관적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조정신청을 위한 형식요건으로 인지),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허위조작보도’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손해배상액을 기입하는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5. 중재지원센터 증거조사(안 제20조제2항)

## 가. 개정안 요지

- 분쟁 조정 시 필요한 경우 중재부는 중재위원이나 중재위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 수집·보고토록 할 수 있게 규정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증거조사) ① (생략)                                                                                                                                      | 제20조(증거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이나 <u>사무처</u>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 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br>-----<br>-----<br>-----<br>-----<br>-----<br><u>중재지원센터</u> -----<br>-----<br>-----<br>-----.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분쟁 조정 시 필요한 경우 중재부가 중재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중재지원센터 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 설립되는 중재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보고를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문체부는 중재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안 제11조제4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동 조문 검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6. 법원의 정정보도등 명령시 매체별 게재기준 준용  
(안 제27조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정할 때에는 개정안 제15조제6항에  
따른 매체별 구체기준에 따라 명해야 함을 명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재판) ① (생략)                                                                                                                                                 | 제27조(재판)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br>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br>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br>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br>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br>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br>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br>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br>다. | ② -----<br>-----<br>-----<br>---때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br>방송-----<br>-----<br>-----<br>-----<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법원이 정정보도청구 등을 인정할 때 정정보도등  
의 내용·크기·시기 등을 정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정할 때 개정안 제15조 제6항에 따른 매체별 구체적 기준<sup>17)</sup>에 따라 명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문체부**는 안 제15조제6항의 매체별 정정보도 방식을 구체화한 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6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동 조문 검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7) TV·라디오·IPTV: 출연자 등장 후 첫 순서에 자막 및 음성 고지 / 신문: 게재 지면 좌상단 / 인터넷신문·뉴스포털: 첫 화면 최상단 /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접속화면 최상위 화면

## 17. 손해배상(안 제30조)

### 가. 개정안 요지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액 증명에 곤란한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손해액 산정 시 법원은 손해 상태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은 개정안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허위조작보도에 쓰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한 자도 언론보도 손해배상 책임 부여(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 제30조(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입히거나-----<br>-----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                                                                                  | ② -----구                                                                                      |

| 현행                                                                                                                                                                              | 개정안                                                                                                                                                                                                                                                                                                                                                                                                                                      |
|---------------------------------------------------------------------------------------------------------------------------------------------------------------------------------|------------------------------------------------------------------------------------------------------------------------------------------------------------------------------------------------------------------------------------------------------------------------------------------------------------------------------------------------------------------------------------------------------------------------------------------|
| <p><u>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손해액 증명이 가능한 손해 영역 외의 별도 손해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법정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손해 상태의 지속기간(특히 제1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u>④ 법원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제2항의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u></p> <p><u>⑤ 허위조작보도에 쓰인 허위 사실을 고의로 공표한 자는 해당 허위사실이 언론사등을 통하여 보도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u></p> |

| 현행       | 개정안                                                                                |
|----------|------------------------------------------------------------------------------------|
| ③·④ (생략) | <u>책임이 있다. 다만, 공표한 자에게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br>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등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손해 지속기간을 고려하며 제5조제2항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조작)보도등에 따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이미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중심의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공감하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이미 동일하게 두고 있어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언론사의 부담은 과중하게 되는 등 언론중재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므로 법률로 그 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서 손해배상액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고려할 것인지 역시 법원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정정보도나 삭제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 단순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장기화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커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의 실익이 적고, ‘제1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

사이의 기간'은 삭제제를 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노조**는 허위사실 유포 등 언론보도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타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의혹 제기, 탐사보도 등 공익적 보도 영역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의혹 제기가 필수적인데 의혹 보도가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의 잠재적 부담이 존재한다면 언론사는 소극적 보도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구체적 손해 입증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탐사보도와 비판 보도를 크게 위축시키고 언론사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하여 공익적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등록 언론은 소송 당사자 특징이 용이한 반면, 비등록 매체는 당사자 특징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등록 언론만 집중적으로 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8. 언론사등의 자료제출의무(안 제30조의2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p>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 ① 언론사등은 법원이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법원은 언론사등의 매체력, 언론보도등의 전파력, 언론보도등의 허위 여부, 손해액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제15조제7항에 따른 자료등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기록등의 제출 또는 제시를 언론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론사등이 자료 제출 또는 제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p> |

| 현행 | 개정안                                                                                                                                                                                               |
|----|---------------------------------------------------------------------------------------------------------------------------------------------------------------------------------------------------|
|    | <p><u>법」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은 “언론보도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본다.</u></p> <p><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론사등이 제출 또는 제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법원이 정한 목적과 방법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결 없이 공개할 수 없다.</u></p>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법원에 대한 언론사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는바, 개정안은 언론사등이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련 자료등의 제출 및 언론사등의 매체력·전파력 확인을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특허법」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제출 자료는 법원이 정한 목적과 방법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신뢰성과 언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제30조의2는 정보통신방법을 차용한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 조항과 연계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언론사등이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언론사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개정안 제30조의2는 정보통신방법을 차용한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 조항과 연계된 조항으로,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사 자료 및 편집·취재 기록 제출 의무화는 취재과정과 취재원 등이 공개될 수 있음에 따라 취재 윤리인 취재원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공익제보·내부고발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특허권 등 침해소송은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준용방식을 취할 경우 본 법을 해석·적용할 때마다 「특허법」 규정을 찾아보고 수정·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법」에 따른 자료제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보다는 개정안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노조는 취재원 보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지금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따로 이를 조문화할 필요는 없음. 판결 없이 언론사등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또한 판결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취재원 보호와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책무를 저해할 우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하게 되면 취재 윤리 중 하나인 취재원 보호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공익제보·내부고발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언론보도의 진위가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소송에 대한 준비 등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후속·심화 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사 자료 및 편집·취재 기록 제출 의무화는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9. 입증책임(안 제30조의3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등이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은 피해자가 부담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u>제30조의3(입증책임) ① 언론보도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등이 부담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등을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u></p> <p><u>1.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등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u></p> <p><u>2. 인용 또는 매개한 언론보도등의 반박적 주장이 담긴 보도를 동시에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u></p> <p><u>③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 보도등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u></p> |

| 현행 | 개정안                                                      |
|----|----------------------------------------------------------|
|    | <u>언론보도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언론보도등의 피해자가 부담한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언론보도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언론보도등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 또는 반박적 주장이 담긴 보도를 동시에 인용 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언론사등에게 입증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언론보도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제30조의3은 정보통신방법을 차용한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 조항과 연계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언론사등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정보통신망법을 차용한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 조항과 연계된 조항으로, 개정안 제30조(손해배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현행법의 기본원칙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뒤집어 언론사등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현행 언론중재법 및 대법원 판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원고)가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고, 다만, 언론사는 그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은 이미 발생한 행위(보도)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언론사의 방어 수단인 반면, 개정안은 보도의 전제 사실 자체의 진실 여부를 언론사가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언론사가 모든 보도 내용을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공익적 보도나 비판적 보도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노조**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언론사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보도의 사실성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에서 사실상  
입증 불능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공익적 감시 보도  
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을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부과하는 것은 공적 사안  
보도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0.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안 제30조의4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누구든지 언론사등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언론사등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 신청 가능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u>제30조의4(전략적 봉쇄소송의 방지) ① 누구든지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이 아님에도 언론사등에 대하여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으로는 민사 또는 형사의 소(이하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할 수 없다.</u></p> <p><u>② 언론보도등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의 소송을 당한 자는 해당 소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u></p> |

| 현행 | 개정안                                            |
|----|------------------------------------------------|
|    | <u>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제도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개정안은 누구든지 언론사등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언론사등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조작)보도 등과 관련된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최민희의원대표발의)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을 이미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언론사등의 과도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규정을 이미 동일하게 두고 있어 언론중재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언론사등에 대하여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 ‘소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 등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개정안이 준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 “소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간판결 신청 대상을 판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개정안이 준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12제4항은 ‘중간판결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동기나 목적을 따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규제 대상을 적절하게 선별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언론사에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과 같은 전략적 봉쇄 소송은 실무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 전략적 봉쇄소송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의 형식을 취하므로, 단순한 소송 서류만으로 “봉쇄 목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항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절차중지의 한계 등을 내포한바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용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1.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등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등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을 여러 차례 확정 받았거나 이미 법원 판결 또는 합의 등에 의하여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 <p><u>피해자 및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u></p> <p>2. <u>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u></p> <p>3. <u>허위조작보도등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u></p> <p>4. <u>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및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u></p> <p>5. <u>허위조작보도등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u></p> <p>6. <u>가해 언론사등의 재무상태</u></p> <p>7. <u>가해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u></p> <p>③ <u>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3조의2(의견제출)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문화체육관광</u></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u></p> <p><u>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u>제33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u></p> <p><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u></p> |

| 현행 | 개정안                                                                                                                                                                                                                                                                                                                                                                                                                 |
|----|---------------------------------------------------------------------------------------------------------------------------------------------------------------------------------------------------------------------------------------------------------------------------------------------------------------------------------------------------------------------------------------------------------------------|
|    | <p><u>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등 확정 사안을 반복 보도·인용·매개한 언론사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문체부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025.10.23.)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이미 동일하게 두고 있어 대다수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므로 형사처벌, 손해배상, 정정보도 의무 등 제재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현재도 언론사는 허위보도에 대하여 형사처벌, 손해배상, 정정보도 의무 등의 제재를 받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 더해 고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력 감시 및

비판을 주저하게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과징금 부과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행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구조로, 정부가 언론보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낳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에서 밝힌 “행정기관이 표현물 내용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와 충돌할 우려(헌재 2004헌마554, 96헌가16 등)가 있고, 현재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정보도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과징금까지 더해지면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2. 과태료(안 제34조제1항)

### 가. 개정안 요지

○ 자료보관 의무 위반 등 사안에 대한 과태료 의무 규정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4조(과태료) ① -----<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br>-----사본,<br>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신설>                                                     |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등에 관한 알림 표시 의무, 정정보도청구등의 청구 사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신설>                                                     | 6. 제18조와 제30조에 따라 청구된 손해배상이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기한 내                    |

| 현행     | 개정안                               |
|--------|-----------------------------------|
| ② (생략) | <u>에 배상하지 아니한 자</u><br>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제15조제7항의 자료보관 의무를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제15조제7항의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17조의2의 알림표시 및 청구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안 제18조(언론중재위)와 안 제30조(법원)에 따른 손해배상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알림표시, 손해배상 등 의무 불이행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체부는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무 불이행을 억제하고 언론사등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안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 제18조(언론중재위)와 안 제30조(법원)에 따른 손해배상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를 과

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상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재 법원이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더해 행정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손해배상을 규정한 타 개별법에서 손해배상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손해배상은 신설하였으나 손해배상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는 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법령을 위반한 국민에게 부과함.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조정조항 또는 판결주문상 손해배상금에는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명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 그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신문협회는 개정안 제15조제7항, 제17조의2, 제18조, 제30조에  
부수되는 법안으로 각 조항들이 정당성을 결여했으므로 개정안  
제34조(과태료)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380 |

## 참고 1

##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 부처 의견

| 부처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국세청<br>(25.1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3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제3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 관련, 국세청도 국세체납 증가, 행정력 부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징수효과 기대 어려움, 수입 전에 수입기관의 수입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이 선행되어야 함이 타당</li> </ul> </li> </ul>                                                                                                                                                                                                                                                                                                                                                                                                                                                                                                                                                                                                                                                                                                                                                                                                                                                                                                                                 |
| 법원행정처<br>(25.12.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의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소송절차 진행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해당 개정이 반드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li> <li>따라서 기존의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에 많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를 들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정정보도청구를 둔 채, '허위조작보도'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정정보도청구와는 다른 요건(해당 청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 확대)으로 도입하는 방법 등 고려</li> </ul> </li> <li>&lt;조항별 검토&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목적) 규정 관련, '인용'의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 필요</li> <li>제2조(정의)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호 사실적 주장 정의 관련, 반론보도청구권 요건 해석을 위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안 제16조에도 사실적 주장 표현 존재)</li> <li>17의3호 허위조작보도 정의 관련,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li> </ul> </li> <li>허위조작보도에 조작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로만 정의되어 있어, 사전적 의미와 그 내용이 맞지 않는 측면,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이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어떤 경우에 허위조작보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음</li> <li>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규정 관련, '언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던 자'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추천 권한을 제약</li> </ul> </li></ul> |

| 부처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 <p>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피해에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정보도에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현재와 같은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li> <li>- 제척기간 관련,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 언론분쟁은 특성상 조기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움(기사가 인터넷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기산점은 규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필요(주관적 기산점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언론사 부담이 증가하는바 언론자유 침해 우려, 다른 입법례도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을 모두 규정)</li> <li>- 삭제 청구 가능 관련, 기사 삭제는 민법 제764조 및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기사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나 언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헌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심리가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음</li> </ul> </li> <li>•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항 정정보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 관련, 피해사실, 허위보도등인지 허위조작보도등인지의 구별은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많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음. 정정보도의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 필요</li> <li>- 제6항 정정보도의 크기, 횟수, 시간, 기간 등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부분 관련,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소송(법 제26조)과 달리 언론사등이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언론사등이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소 제기가 전제되는 것이 아닌 제15조 제6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상 어색한 측면(법 26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li> <li>•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관련,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li> </ul> |

| 부처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 <p>보도등에 관해 허용되는 것인데 단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아 본문과 단서의 내용 모순, 의견에 대해서까지 반론 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논평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반론보도청구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조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관련, 제목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이고 내용도 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사업자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체계 정비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li> <li>• 제30조(손해배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5천만원의 범위 한정 부분 추가 검토 필요 :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므로 법률로 그 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서 손해배상액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li> <li>- '제1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 사이의 기간' 고려 부분 추가 검토 필요 :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고려할 것인지 역시 법원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정정보도나 삭제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 단순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장기화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커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음. 따라서 해당 조항 불필요하고 적어도 괄호(특히 제1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 사이의 기간)는 삭제되어야 함</li> </ul> </li> <li>• 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에서 특허법 자료제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본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특허권 등 침해소송은 성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준용방식을 취할 경우 본 법을 해석·적용할 때마다 특허법 규정을 찾아보고 수정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도 발생</li> </ul> </li> <li>• 제30조의4(전략적 봉쇄소송의 방지) 관련,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측면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등에 대하여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 "소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간판결 신청 대상을 판별하는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li> <li>- 또한 개정안이 준용하는 망법 제44조의12 제4항은 '중간판결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공공의 이</li> </ul> </li> </ul> |

| 부처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 <p>익과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동기나 목적을 따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규제 대상을 적절하게 선별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입법례·제도의 장단점 및 개선 논의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li> <li>• 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 관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제도 언론사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 형사처벌, 손해배상, 정정보도의무 등의 제재를 받고 있고 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 더해 고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력 감시 및 비판을 주저하게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과징금 부과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할 필요</li> </ul> </li> <li>• 제34조(과태료) 관련, '손해배상이 조정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태료 사유로 규정한 부분은 추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법령을 위반한 국민에게 부과함.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조정조항 또는 판결주문상 손해배상금에는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명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간 경우 그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실익도 크지 않음</li> </ul> </li> </ul> |

#### ○ 협회 의견

| 협회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언론중재위원회<br>(25.1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호 언론보도 정의 관련,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론'의 행위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li> <li>- 16호 정정보도 정의 관련 기사수정 및 기사삭제(열람차단)는 전형적인 정정보도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구제수단의 명확성 및 권리의 성격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li> </ul> </li> </ul> |

| <b>협회명</b><br>(의견제출일자)         | <b>의견 주요내용</b>                                                                                                                                                                                                                                                                                                                                                                                                                                                                                                                                                                                                                                                                                                                                                                                                                                                                                                                                                                                                                                                                                                                                           |
|--------------------------------|----------------------------------------------------------------------------------------------------------------------------------------------------------------------------------------------------------------------------------------------------------------------------------------------------------------------------------------------------------------------------------------------------------------------------------------------------------------------------------------------------------------------------------------------------------------------------------------------------------------------------------------------------------------------------------------------------------------------------------------------------------------------------------------------------------------------------------------------------------------------------------------------------------------------------------------------------------------------------------------------------------------------------------------------------------------------------------------------------------------------------------------------------------|
|                                | <p>청구권으로 입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의2호, 17의3호 허위(조작)보도 정의 신설 관련,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를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별도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li> <li>• 제11조(사무처와 중재지원센터)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사무공간, 기타 운영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증액이 수반될 필요</li> <li>-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이행에 대한 제재권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li> </ul> </li> <li>•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의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되는 부담이 있고 특히 온라인상 보도에 대해서는 기한의 제약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무제한 계속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li> <li>* 21대 국회에서 안 날부터 6개월, 보도등이 있을 후 1년으로 정한 바 있음</li> </ul> </li> <li>•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관련,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과 후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취지 및 조항간 정합성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li> <li>• 제17조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확정판결 전 정정보도의 내용을 게재하게 하는 것은 상급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li> <li>• 제18조(조정신청)에서 피해자가 허위(조작)보도 여부를 구별하여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도록 한 것 관련,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하므로 허위 조작보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구별 기입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li> <li>• 제34조(과태료) 관련, 손해배상 미이행은 당사자간 지연배상금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행정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li> </ul> |
| <b>전국언론노동조합</b><br>(25.11.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의3호 허위조작보도 정의 관련, 표제 불일치 :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아니라 조작행위의 여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li> <li>- 19의2호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정의 신설 관련, 온라인 언론 콘텐츠는 새롭게 개정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의 수범대상이기도 하므로 이중규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간의 수범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li> </ul> </li> <li>•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6항 매체별 정정보도 게시방법 구체화 관련, 게시방식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는 것보다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의견</li> <li>• 제17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최초의 결정·판결·합의가 나왔을 때 해당 내용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규정한</li> </ul>                                                                                                                                                                                                                                                                                                                                                                                                                                                                                                                                                                                              |

| 협회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 <p>것 관련, 확정 결정이나 판결 전에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내용을 자세히 표시하게 하면 사실상 정정·반론·추후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짐. 이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에 대한 언론위의 조정 결정이나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게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적어도 청구내용 표시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심지어 개정안은 청구 사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하고 있음(제 34조 과태료 ①의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조(손해배상) 제5항 허위조작보도에 쓰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관련,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에 대한 법제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등 언론보도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민형사 상의 타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li> <li>• 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 관련,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언론사가 '따라야한다'라고 '의무'화할 경우, 취재원 보호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지금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따로 이를 조문화할 필요는 없음. 판결 없이 언론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 또한 판결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힘. 취재원 보호와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책무를 저해할 우려</li> <li>• 제30조의3(입증책임) 관련,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명예훼손 소송은 대부분 언론사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실무상 언론사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를 위한 증거 제출 등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시행되는 상황으로 명문화 불필요</li> </ul> |
| 한국신문협회<br>(25.12.1.) | <p>개정안 전면 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2호 관련, '인용'을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모호해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li> <li>• 제2조(정의)제17의2 및 제17의3 관련,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li> <li>•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및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li> <li>- 반론보도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히는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li> </ul> </li> <li>• 제15조(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제6항 관련, 신문사의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lt;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gt;으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신문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li> </ul>                                                                                                                                                                                                                                                                               |

| <b>협회명</b><br>(의견제출일자)          | <b>의견 주요내용</b>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정보도 결정 내용을 기사별로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행 조정·합의 중심 제도와 부합하지 않음</li> <li>-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된 광범위한 '알림 표시 의무'는 사실상 사법절차 진행 상황의 상시적 공개를 강제해 과도한 규제에 해당</li> </ul> </li> <li>• 제30조의2(언론사등의 자료제출 의무) 관련, 언론사 자료 및 편집·취재 기록 제출 의무화는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li> <li>• 제30조의3(입증책임) 관련, 보도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부과하는 것은 공적 사안 보도의 위축을 초래</li> <li>• 제30조의4(전략적 봉쇄소송의 방지)&gt; 관련,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은 요건의 추상성, 항고 불가 구조, 절차중지의 한계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용을 억제하기 어려움</li> <li>• 제30조(손해배상)제2항, 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gt;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손해액 신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우려</li> <li>-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행정권의 언론 규제를 제도화할 우려</li> </ul> </li> <li>• 제34조의(과태료) 관련, 개정안 제15조제7항, 제17조의2, 제18조, 제30조에 부수되는 법안으로 각 조항들은 정당성을 결여했으므로 삭제</li> </ul> |
| <b>한국기자협회</b><br>(25.1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언론단체들과 함께 허위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li> <li>• 관련 법들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계 차원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옴</li> <li>• 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항별 의견은 현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발의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li> </ul>                                                                                                                                                                                                                                                                                                                                                                                                                                                                                                                                                                          |
| <b>한국인터넷신문 협회</b><br>(25.1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0조(손해배상)제2항 구체적 손해입증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사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하여 공익적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 탐사보도와 비판 보도 위축 우려</li> <li>• 제33조(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한 과징금) 관련, 문체부 장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비등록 매체의 등록 회피유인을 강화하여 규제 형평성 상실</li> </ul>                                                                                                                                                                                                                                                                                                                                                                                                                                                                                                                                                                                       |

## 참고 2

##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

- 관련 통계 ※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 1) 조정

(2025년 11월말 기준 / 단위 : 건)

| 연도      | 청구<br>건수 | 처리결과  |        |        |    |                 |     |     |       |     |     | 피해<br>구제율<br>18)(%) |
|---------|----------|-------|--------|--------|----|-----------------|-----|-----|-------|-----|-----|---------------------|
|         |          |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 |        |    | 조정<br>불성립<br>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계류  |                     |
|         |          |       | 동의     | 이의     | 계속 |                 |     |     | 구제    | 미구제 |     |                     |
| 2015    | 5,227    | 940   | 218    | 101(2) |    | 710(4)          | 322 | 32  | 2,633 | 271 |     | 77.9                |
| 2016    | 3,170    | 961   | 182    | 118(4) |    | 416(5)          | 108 | 19  | 1,049 | 317 |     | 72.3                |
| 2017    | 3,230    | 915   | 72     | 61     |    | 488(6)          | 122 | 86  | 1,234 | 252 |     | 73.7                |
| 2018    | 3,562    | 1,081 | 111    | 89(7)  |    | 645(8)          | 88  | 12  | 1,264 | 272 |     | 71.4                |
| 2019    | 3,544    | 1,129 | 121    | 100(6) |    | 734(26)         | 279 | 65  | 932   | 184 |     | 69.2                |
| 2020    | 3,924    | 1,245 | 166    | 99     |    | 891(11)         | 275 | 34  | 1,029 | 185 |     | 67.8                |
| 2021    | 4,278    | 1,221 | 146    | 73(4)  |    | 894(16)         | 596 | 132 | 838   | 378 |     | 62.7                |
| 2022    | 3,175    | 949   | 69     | 34     |    | 684(8)          | 450 | 193 | 686   | 110 |     | 67.6                |
| 2023    | 4,085    | 1,599 | 61     | 34(3)  |    | 793(20)         | 145 | 113 | 1,152 | 188 |     | 74.1                |
| 2024    | 3,937    | 1,452 | 88     | 66     |    | 649(14)         | 336 | 38  | 1,028 | 280 |     | 72.5                |
| 2025.11 | 3,592    | 1,307 | 17     | 25     | 1  | 663(13)         | 220 | 41  | 675   | 186 | 407 | 70.0                |

### 2) 매체유형별 청구현황

(2025년 11월말 기준 / 단위 : 건(%))

| 연도      | 청구<br>건수   | 신문        |          | 방송        | 잡지      | 뉴스<br>통신 | 인터넷         |              | 기타      |
|---------|------------|-----------|----------|-----------|---------|----------|-------------|--------------|---------|
|         |            | 일간<br>신문  | 주간<br>신문 |           |         |          | 인터넷<br>신문   | 인터넷뉴스<br>서비스 |         |
| 2015    | 5,227(100) | 619(11.8) | 138(2.6) | 892(17.1) | 18(0.3) | 264(5.1) | 2,490(47.6) | 799(15.3)    | 7(0.1)  |
| 2016    | 3,170(100) | 405(12.8) | 168(5.3) | 423(13.3) | 16(0.5) | 165(5.2) | 1,661(52.4) | 330(10.4)    | 2(0.1)  |
| 2017    | 3,230(100) | 261(8.1)  | 119(3.7) | 361(11.2) | 23(0.7) | 206(6.4) | 1,842(57.0) | 416(12.9)    | 2(0.1)  |
| 2018    | 3,562(100) | 306(8.6)  | 145(4.1) | 331(9.3)  | 19(0.5) | 192(5.4) | 2,141(60.1) | 421(11.8)    | 7(0.2)  |
| 2019    | 3,544(100) | 357(10.1) | 105(3.0) | 436(12.3) | 12(0.3) | 187(5.3) | 2,055(58.0) | 388(11.0)    | 4(0.1)  |
| 2020    | 3,924(100) | 384(9.8)  | 122(3.1) | 465(11.9) | 4(0.1)  | 247(6.3) | 2,102(53.6) | 596(15.2)    | 4(0.1)  |
| 2021    | 4,278(100) | 322(7.5)  | 131(3.1) | 495(11.6) | 8(1.9)  | 216(5.0) | 2,477(57.9) | 609(47.7)    | 20(4.7) |
| 2022    | 3,175(100) | 234(7.4)  | 75(2.4)  | 387(12.2) | 6(1.9)  | 149(4.7) | 1,857(58.5) | 450(14.2)    | 17(0.5) |
| 2023    | 4,085(100) | 388(9.5)  | 99(2.4)  | 345(8.4)  | 8(0.2)  | 218(5.3) | 2,491(61.0) | 498(12.2)    | 38(0.9) |
| 2024    | 3,937(100) | 287(7.3)  | 89(2.3)  | 317(8.1)  | 10(0.3) | 176(4.5) | 2,537(64.4) | 473(12.0)    | 48(1.2) |
| 2025.11 | 3,592(100) | 191(5.3)  | 88(2.4)  | 306(8.5)  | 6(0.2)  | 195(5.4) | 2,307(64.2) | 411(11.4)    | 88(2.4) |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3) 청구형태별 처리현황

(2025년 11월말 기준 / 단위 : 건)

| 청구명 | 청구 건수 | 처 리 결 과  |            |             |     |    |     |     |
|-----|-------|----------|------------|-------------|-----|----|-----|-----|
|     |       | 조정<br>성립 | 직권조정<br>결정 | 조정불성<br>립결정 | 기각  | 각하 | 취하  |     |
|     |       |          |            |             |     |    | 구제  | 미구제 |
| 정정  | 1,643 | 636      | 21         | 332         | 133 | 13 | 251 | 75  |
| 반론  | 621   | 273      | 11         | 94          | 49  | 4  | 74  | 32  |
| 추후  | 80    | 4        | 0          | 2           | 1   | 4  | 50  | 17  |
| 손배  | 1,248 | 394      | 11         | 235         | 87  | 20 | 300 | 62  |
| 계   | 3,592 | 1,307    | 43         | 663         | 270 | 41 | 675 | 186 |

**참고 3****관련 언론보도**

- 관련 언론보도

| 기사제목                                       | 언론사(보도일자)                                   |
|--------------------------------------------|---------------------------------------------|
| 언론중재법도 논란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맞춰 개정 추진           | 한겨레('25.11.17)                              |
| 민주당, 망법 우려 그대로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 기자협회('25.11.19)                             |
| '사실' 아닌 '의견'도 "반론보도 청구 가능" 명문화...누구에게 이로우까 | 미디어오늘('25.11.22)                            |
| [자유廣場] 다자감시 '원형감옥'에 갇힐 한국의 언론들             | 자유일보('25.11.26)                             |
| 신문협회 "언론 자유·편집권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 연합뉴스, 한국경제, 세계일보('25.12.2.), 동아일보('25.12.3) |